

## 03

# 대의 변화를 읽다, 공정의 기준을 넓히다

- 가상자산부터 외국인 납세자까지, 징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 # 프롤로그: 징수, 강제에서 관리로

세금 징수라고 하면 흔히 ‘압류’나 ‘독촉’ 같은 강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강남구 세무관리과가 정의하는 징수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징수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이나 은행 예금에만 자산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 속 가상자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행정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납부할 방법’을 찾아주고, 제도를 몰라 체납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공정한 세무 행정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 # 제1막: 디지털 자산, 숨은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자산 관리의 트렌드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이제 일부의 투기 수단이 아닌, 보편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세무 행정 시스템이 이러한 자산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없는데, 생활 수준은 여유롭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납세자가 자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영역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재산 가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